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박 영 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4-06

북한의 대남 심리적 도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은 지난 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상호 비방금지'를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뼈라살포를 '선전포고의 전쟁도발행위' 및 '노골적 심리전'으로 규정한 후, 5월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다룬다.

'적대와 증오(憎惡)'의 선전선동술

북한의 전통적 선전선동술에 기초한 심리전이 최근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화되고 있다. 북한 선전선동의 핵심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감성·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당과 수령의 교시에 즉각적 감동과 집단행동 유발이 목표이다. 독재의 선동술로 대중의 이성적 사고를 차단하고 김정은에게로의 무조건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적대와 분노 유발의 정치'가 작동한다. 이는 파시즘 선전선동술로 히틀러의 책사였던 괴벨스에 의해 정형화된 기법이다. 그 특징은 단순·원색·직설·공격적 수사로 적에 대한 원초적 적대감과 분노 극대화, 이를 통해 통치자와 자신의 희망을 일체화시키고 자발적 신민(臣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김일성시기 북한은 스탈린체제의 선전법을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쉬운 단어에 파시즘 기법을 결합하였다. 이어 선전선동을 중시한 1970년대 김정일 시기, '적대와 분노'가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되도록 체계화

하였다. 그 메커니즘은 △유아기 놀이·교육으로부터 노년기 생활총화까지 생애 전체에 진행 △수령교시와 당방침의 반복 선전·암송·암기로 주민들에게 내재화 △이 과정에서 권력의 언어가 개인의 언어가 되도록 유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일체화시키며 집단적 충성심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 대중통치술의 원형은 북한의 1970년대 선전선동술 및 3대혁명소조운동이다.

대남 심리전 강화 양상

시작은 3.24. 핵안보정상회의, 3.26. 한·미·일 정상회담, 3.28.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 대북 국제외교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드레스덴 통일구상, 대북외교, 무인기 침투, 위장 탈북화교 사건, 세월호 참사, 오바마 방한·한미정상회담, 인권문제를 이슈로 고도화되고 있다. 박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비방 및 인신공격과 함께 비방중상 합의위반·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그 형식도 개인 필명, 기관·단체 명의로 답화, 진상공개장, 공개질문장 등 다양하다. 3월 말~4월 초에는 노동신문·중앙통신을 통해 개인 명의로, 4~5월에는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평통·국방위 및 각 기관·단체·군대 등 공식 기구들에 의해, 성폭력·반인권적 비방과 욕설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한 남측 국방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범죄적인 북침통일각본, 체제통일을 노린 전쟁각본”이라며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한편, ‘군사적 대결·체제대결 야망을 드러낸 전쟁포고’로 규정하며 대외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를 ‘북한 사회주의체제 공고화’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 결속력 강화에 활용하기도 한다.¹⁾ 그 배경과 의도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포함한 국가적·집단적 도발은 대내정치, 대외관계, 역사문화 요인들과 통치자 특성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최근 북한의 심리적 도발 역시 이 배경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내정치·대외관계 배경

대내정치 배경으로 먼저 2014년 북한정책의 핵심기조가 ‘선전선동의 사상전’이기에 그 일환인 대남 선전선동의 강화이다. 그 준비는 2013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12일 김정은이 북한군에서 적군(敵軍)을 와해하는 공작업무와 대남 심리전 담당요원인 적공(敵攻) 간부들을 불러 모아 격려한 제4차 군적공일꾼대회 후인, 작년 11~12월 장성택 처형 국면에서부터 대남 심리전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관계 측면에서는 3월 초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이 온건한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진 것에 대한 ‘군부의 불만 증대’일 수 있다. 올해 1~3월 역대 북한군 수뇌부 중 가장 강성의 군 인사들이 대남 전방부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밀리면 죽는다”, ‘확전 도발이 승리의 기초라는 강경의식이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4월 연이은 대내 정치일정에 맞춘 대남 적대심 고조 필요성, 김정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간부들의 충성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남·대외 배경으로 우선 이산가족 상봉(2.20~25)의 대가로 5.24조치 해제 등 남측의 대북정책 변화를

1) “체제통일 흥계가 비긴 도발적인 전쟁각본”, “상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등을 제목으로 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2014년 5월 27일자 참조.

유도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적대적 대응이다. 그리고 북핵불용의 한미·한중 공조 강화 행보에 대한 분노 및 국제적 고립 증대와 함께 대외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와 UN인권이사회회의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에 대한 맞대응 전술이다. 더불어 민간의 대북빠라살포 및 언론을 북한처럼 통제할 수 없는 남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작년 12월 25일과 올해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에 대한 남측의 무대응을 ‘김정은 정권 무시’로 인식했을 수 있다.

역사문화적 배경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요인이 물리력 보다 더 중요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전후방을 막론하고 심리적 충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도발을 선호한다. 즉, 정치군사적으로 심리전을 중시하는 북한의 군사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 군사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구조는 항일투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발전된 게릴라 특성에 기초한다. 그 3대 특징은 △적의 배후와 핵심을 기습하는 비대칭 도발 △객관적 상황이 불리할수록 공세적 태도 과시와 도발 △적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반정부 선동 및 통일전선 강화이다.

다음으로 북한사회의 성차별적 가부장(家父長) 문화이다. 10년 이상 군생활을 하는 병영사회이며 수령 가부장 체제인 북한의 여성비하 의식 및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탈북민들의 자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박대통령 비방내용은 북한사회에 만연한 욕설에 비해서는 “점잖은 편”이라고 한다. 즉, 저발전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을 반영하는 욕설문화가 작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군대와 남성들의 무력감 반영이다. 선군정치가 20년 이상 지속되나 실제 전투가 발발하지 않고 생활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북한 군인과 남성들이 무기력 해지고 있다. 한편 시장화로 여성·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 군대와 남성사회의 불안감 및 불만이 투영되어 있다.

리더십 경쟁과 김정은의 기질

남북한 리더십 경쟁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집권 3년차에 들어서도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과의 대화를 해보지 못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김정은의 대남 리더십 경쟁의식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의 기질도 작용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성장과정과 유전학적 정보 및 기간 통치 패턴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활달한 친화력과 리더십이 있고 △김일성의 예민함과 김정일의 감수성을 이어 받은 한편 △조급하고 다혈질적이며 △충동적이고 과격한 성격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기질과 남북 리더십 경쟁 특성에 기초할 때, 최근 대남 심리전에는 다음의 통치자 요인이 개입한 듯하다.

첫째,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대내외적으로 빨리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수령 가부장 리더십이다. 북한의 현지도도 방송·사진들에서 김정은이 수많은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연로한 수행간부들이 수첩을 들고 항상 분주하게 메모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무시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반응하는 불안한 리더십이다. 이영호 숙청과 장성택

처형을 결정한 개인적 요인도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및 정보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정치에 능숙한 박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경쟁의식이다. 집권 2년차인 박대통령이 통일담론을 주도하며 드레스덴 통일구상·능숙한 외교활동·여성리더십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경쟁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성차별 의식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가 군인·제대군인인 북한 2~30대 남성들의 여성비하 문화는 치기(稚氣)와 결합되어 40대 이상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적 도발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심리적 도발의 의도와 목적

첫째,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이다. 북한의 정치행사가 집중된 4월에 대남 비방·선동이 3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반미 선동은 1/2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 양상과 최근 북한 정치행보에 기초할 때, △4월 각종 정치행사 시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민심 결집용, △연초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군사 훈련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 수용 등에 불만을 가진 군부의 요구반영·군심장악 의도가 보인다. △적아(敵我) 대립선동으로 주민과 군인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대남 적대와 증오심을 강화시켜 집단적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다. 북한 체제유지의 주요인이 경쟁상대인 남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도발의 정당성 확보이다. 새로운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성 확보이다. 대외·대남 비방을 통해 도발명분을 만들면서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3월 30일 선언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은 시효가 없다고 재차 선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제·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 폭력성을 조장하며 △적대정책·군사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군사적 도발결정의 첫째 이유는 적대와 증오의 원초적 폭력성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변 환경을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셋째, 반정부 선동·통일전선전술 강화이다. 세월호 참사 후 박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비판 여론 확산에 편승하여 반정부 투쟁을 조장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언론과 인터넷에서의 현 정부 비판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선전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6.4 지방선거 결과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남남갈등 유발·반정부 선동·친북세력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UN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압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

대응 방향

김정은 정권 들어서 대남정책의 진폭이 크고 다양해졌다. 최악의 대남 비방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신청하는 등 강은양면의 대남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심리적 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심리적 도발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원칙 고수와 ‘자존감’ 강화 및 ‘역대응’이다. 북한 도발문화의 단기 내 변화는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 대응을 피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북의 적대적 대남 경쟁구도에 대한 맞대응 보다 양성평등·인권 우월성 등 우리 체제의 ‘자존감’을 강화하면서, 북한 심리전의 역사문화적 이해력 및 이에 대한 분석력·대응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외 북한 인권·여성차별철폐·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대북 인도적 지원·남북교류 사업 등과 연동될 수 있다.

둘째, 북한 도발의 정체성·문화적 속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북한의 공식논리에 근거해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박대통령에 대한 조평통 등의 성폭력적 욕설들은²⁾ ‘예의지국이며 여성해방을 이루었다는 북의 주장과 남녀평등법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특히 ‘화냥’, ‘위안부’ 등 외세약탈과 민족을 지켜내지 못한 권력층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반민족적 용어를,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북한 공식기구’에서 욕설로 사용한 점은 김정은 정권의 ‘패륜적 역사관’을 보여준다.

셋째, 남북 당국 간 합의문에 근거한 상호비방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남북회담 제안이다. 남측의 언론과 인터넷에 떠도는 우리 사회의 내부 비판여론을 항상 역이용하는 북한당국이 알고 있듯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는 민간단체와 여론을 북한처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국 간 회담과 민간·여론의 동향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북의 ‘무인 기사건 공동조사 제안’에 대한 군사회담 제안 식의 심리적·주도적 역대응도 필요하다. 이때 공동 조사단을 남·북·중·미 4자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신뢰프로세스 작동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발상 전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이 북한 중하층 엘리트와 군인, 주민들의 대안사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계층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및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층 1%와 일반 엘리트들이 공동운명체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선전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은 ‘상호 차이의 이해 ⇨ 소통 ⇨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 체제와 주민의 친화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27일.